

# 中, 對美 수출 감소 관건… 기업 투자 결정 지연될 듯

##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세 조정돼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분쟁 해소 어려워… 불확실성 지속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게재된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부과 등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규

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3월 500억 달러 규모의 대(對) 중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됐다.

7~8월 중 미국이 대중 수입품(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동일 규모로 대응했다. 9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임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가 8일 서울 종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11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 수출 규모는 각각 1421억달러, 68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8%, 12.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수입증가가 수출용

대중 수출의 79.8%가 중간재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현재까지 시행된 미·중 무역 규제 조치가 올해 중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이 소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89@metroseoul.co.kr

## 실물경제 상승에도 균원물가 오름세 둔화

### 최근 균원물가 동향

글로벌·국내 요인 큰 변화 없어

정부 정책 등이 상승률 낮춘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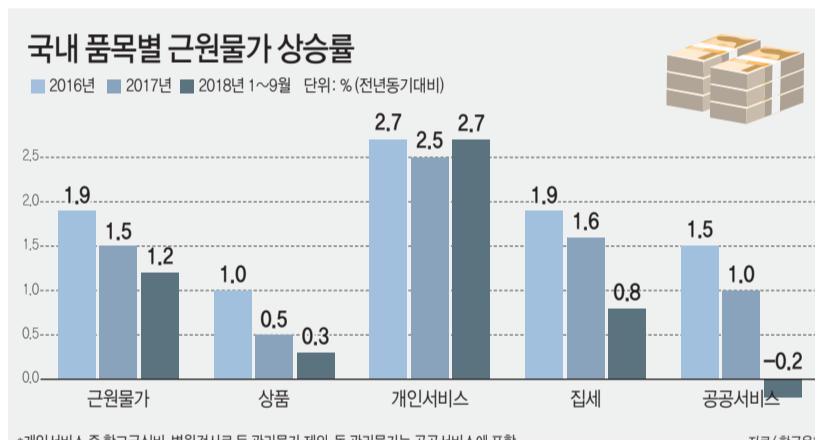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균원물가는 실물경제가 잠재성장을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게재된 '최근 균원물가 동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균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상당폭 확대되고 있는 주요국 균원물가의 움직임과 상이한 것이다.

한은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품목별 특이요인 영향이 커지면서 균원물가 상승률을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균원물가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는 확대된 반면 상품물가 상승률은 둔화됐다. 집세,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하락했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상품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했지만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는 0.3%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집세는 각



각 1.6%에서 0.8%로 상승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0%에서 -0.2%로 하락 전환됐다. 반면 개인서비스는 2.5%에서 2.7%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품목별 기여도를 보면 올해 중 균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의 기여도가 각각 0.2%포인트 및 0.1%포인트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물가와 상품물가의 기여도 변화는 각각 +0.04%포인트, -0.04%포인트였다.

한은이 필립스곡선 모형을 이용해 균원물가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의 기여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 정책 등 기타요인이 균원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요인으로는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하고 비에너지 수입물가도 오름세가 확대됐으나 올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균원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요인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갭률의 기여는 소폭 높아졌으나 크기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타요인은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요인이 반영돼 상당폭 마이너스 기여를 나타냈다.

한은은 "향후 균원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감에 있어 거시적 요인과 함께 품목별 특이요인의 전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 가계부채,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

###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 수도권 주택가와 상호 영향 미쳐

올해 들어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게재된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2분기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크다"며 "가계신용순환을 보더라도 2014년 이후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9.3%, 경기 24.7%, 6대 광역시 22.6%, 기타 23.5%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



출이 크게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은 2011년~2014년 14.8%에서 2015년~2018년 2분기 44.5%로 큰 폭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1%에서 2018년 2분기 말 38.6%로 꾸준히 올랐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 신용 중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 다단계판매업자 1년반 만에 감소세… 3분기 148개

### 공정위,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3분기에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영업을 중단했다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3분기(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전분기(152개)보다 4개 줄어든 148개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에 전분기보다 1개 줄어든 뒤 매 분기 증가했지만 올해 3분기에 감소로 돌

아섰다.

3분기에는 5개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3개 사업자가 직원 말소됐다. 또한 신규 등록 사업자는 4곳이다.

멘, 디앤에이라이프 등은 직원 말소됐다.

또한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등 2개 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이처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에스에스씨인터내셔널 등 9개사는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요 정보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는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